〈6 · 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 다시 로그인!

2021. 6. 15.(화), 14:00~17:3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주관 : 민화협 정책위원회
후원 : 통일부

목 차

【인 사 말】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07
	김홍걸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표의원	10
【 1 세 션】	"MZ세대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엄익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15
	유재영 민화협1020통일공감기자단 ·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21
	윤세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수료	25
	이용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1
	정다와 (사)평화3000 간사	35
【 2 세 션】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현주소"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41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53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69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국국제정치학회장	75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북한연구학회장	79
【참고자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86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90
	〈9월 평양공동선언〉	94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5.22)〉	97
【MEMO】		104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Program

개 회 식 14:00 ~ 14:20	· 인 사 말 :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홍걸**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표의원 · 축 사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화협 상임의장 · 기념촬영
1 세 션 14:20 ~ 15:20	**“ MZ세대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 · 사 회 · **정대진**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 토 론 · **엄익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 **윤세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수료 · **이용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정다와** (사)평화3000 간사
15:20 ~ 15:30	**휴 식**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Program

2 세 션 15:30 ~ 17:20	“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현주소 ” · 사 회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전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 토 론 ·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북한연구학회장
17:20 ~ 17:30	폐 회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발표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민화협kcrc”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종걸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21주년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기념하는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하여 행사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김홍걸 의원님, 그리고 늘 민화협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웅래 민화협 상임의장님, 김성민,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님, 줌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신 정책위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다시 로그인!>이란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위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토론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는 국내 최고의 남북관계,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MZ세대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다섯 분의 청년이 함께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주체들이 들려줄 이야기들도 기대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화협은 1998년 설립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

구하고 오직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른바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소중한 약속들을 민간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민간이라는 한계를 절감할 때도 많았지만, 오히려 민간이기에 가능한 역할을 찾아 부단히 뛰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 시기에서도 우리의 길을 놓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이는 민족의 화해와 나아가 우리 민족 모두의 숙원인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호된 질책이 있었기에 민화협은 지금도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복원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부 또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당국 모두 이산가족상봉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 나아가 통일의 길은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친미, 친중과 같은 단순한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큰 평화통일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화협 역시 민간통일외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이 중심이 되고, 동시에 주변국가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그래왔듯,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그리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평화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 종 걸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표의원 김홍걸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반도 평화, 다시 로그인!'을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던 역사적인 회담이 2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그때처럼 밝지만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함께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교류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려면 남과 북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북미관계가 좋지 않다고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민간교류 재개 등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북측도 신뢰를 갖고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이 그 당사자이지만 주변국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대 표 의 원 김 홍 걸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 1세션]

“ MZ세대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

■ 사　　회 : 정대진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 패　　널

- 엄익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 유재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 윤세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수료
- 이용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정다와 (사)평화3000 간사

통일이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이 되지 않도록[1)]

엄 익 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 상임위원

2015년 8월, 지뢰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저는 파주의 어느 산 정상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총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상급부대에서는 국지도발로 인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를 보급하고 하급부대에게 생존성 강화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 부대원들은 서서히 전쟁의 공포에 노출되어 갔습니다. 최후통첩이 있던 그날 오후 4시, 한 시간 가량을 남겨둔 상태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군 통신망으로 언론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군사 작전과 군사 비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지시로 저는 실제로 유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탈했지만 북한에 대한 공포를 그날만큼 크게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는 아마 위와 같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전쟁광이 아닌 이상, 피를 흘려가며 싸우고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으니까요. 더구나 나를 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국가가 무

1) 해당 글은 2017년 7월 참가한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리더캠프(국외)에서 필자가 동료들과 나눴던 논의를 각색한 것입니다.

너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흔히들 평화와 통일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평화 없는 통일이나 통일 없는 평화는 흔히들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실은 평화 없는 통일이나 통일 없는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두 체제의 권력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체제를 포기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국가 1민족 1정부 1체제라는 완전한 통일(남측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이 붕괴(흡수통일)되거나 무력으로 북진통일(녹화통일)하지 않는 이상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은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최후의 저항을 할 수도 있고 세계열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다시금 서로의 명분으로 개입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1국가 1민족 1정부 1체제라는 완전한 통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공동 어로수역을 형성하는 식으로 NLL이 다시 조정될 수도 있고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으며 북한의 유사시를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의 존속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북한 정권의 존속을 돕는다는 것은 그들의 인민들의 생사여탈권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서로간의 군 병력을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평화냐고 되묻겠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더욱 강력한 미국으로부터 침략 받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결국 평화라는 것은 서로를 서로의 입맛대로 통일하려는 폭력과 반대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렇듯 평화와 통일은 서로 간에 딜레마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이어, 저는 통일이 지금의 상태에서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통일부, 통일리더, 통일캠프 모두 다 두근거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도 똑같이 통일부, 통일리더, 통일캠프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근거리시나요? 아마 쉽사리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통일은 달콤한데 북한 입에서 흘

러나오는 통일은 어찌 섬뜩하기만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가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적화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북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저는 사랑으로 비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흔히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모두 다 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자치의 영역입니다. 즉 한 개인으로 비유하자면, 일찍 일어나고, 소식하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등의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외부 요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주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강제력이 권위와 권력, 정당성과 공공성,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용인됩니다. 개인의 관점으로 비유하자면 더 자고 싶은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깨우고, 더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즉 통일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을 관리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은 있겠으나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랑을 원하는 누군가가 왜 상대방이 내 뜻대로 넘어오지 않느냐며, 폭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려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사랑을 폭력으로 굴복시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과연 상호 동의한 온전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통일이 대박이기 위해서는, 통일이 진정한 사랑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랑인 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뿐입니다. 즉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통일이 저들에게는 침략이자 식민지화겠지요. 우리가 일본에게 식

민지화 되었을 때 왜 그토록 저항했나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합방을 통해 좋은 것들이 많다고 제 아무리 달콤한 말을 늘어놓아도 우리는 끝내 저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명분입니다. 북한이라고 한민족이라서 일본과 경우가 다를까요. 벌써부터 민족이란 허구라고 남한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남한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북한으로서는 더더욱 남한의 존재가 반갑지 않고 두려울 것임이 자명합니다. 뭐든 강제적인 것은 싫고 누구나 자유는 좋아하는 법이니까요. 강제적 방식의 통일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통일의 폭력성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에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통일 반대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통일은 마치 상대가 거절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 상태와 같으니 오히려 비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연인 관계로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서로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연인들, 때로는 반성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결국 이해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마는 연인들 말이죠. 만남이 어렵다면 집착이 아닌 결국 헤어짐이 현명한 판단인 것이죠.

제가 던지고 싶었던 화두는 헤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점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데 헤어졌던 한반도의 비극에 종지부를 온전히 찍을 수 있겠죠. 사랑은 자기 것만 고집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해한다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는 공포뿐만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이권을 서로 챙기려고 북쪽으로 진출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들도 마땅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통일에 대한 외골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좋은 통일(혹은 평화)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이 유약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통일을 갈망하는 동료로부터 하루 빨리 북한에 미사일을 떨어트려야 한다

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서로의 아득한 간격에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그럼에도 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토대 위에 조심스럽게 쌓인 결실이 적대감을 길러 단 한 번에 적을 말살하는 방식보다 현실적이라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의 딜레마,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들 인민임을 안다면, 그 정권을 붕괴시킬 주체도 그들 인민일 것이며, 그들 인민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정권과 인민을 분리시킬 수 없음 또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많이 없고, 안다고 해도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쉽사리 확신도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옳다고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억누르고 싶습니다. 항상 틀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견으로 귀를 열어 다양한 방식에서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것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의 담론은 그런 의미에서 던졌던 화두였음을 밝힙니다. 신이 정답을 주지 않는 이상, 걸어볼 희망은 우리의 집단지성일 뿐입니다. 우리를 설득시켰던 무언가가 우리가 아닌 사람들도 설득시켜 그들이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어느 청년의 이야기

유 재 영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

■ 내가 기억하는 6·15 vs 글로 배운 6·15

- 아는 것만큼 보이는 6·15, 그리고 통일교육

2000년 6월 15일 나는 초등학생이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의 만남은 분단의 아픔 그리고 적대 감정의 극복으로 보도되었다. 노래 '반갑습니다'가 지상파를 휩쓸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평화 글짓기와 표어 대회가 한창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기자기한 추억거리이면서도, 막상 내가 기억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여기까지라는 사실에 놀랐다. 6·15 공동선언에서 강조된 통일을 위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이를 계기로 추진된 남북 경제 및 문화 사업에 관한 내용은 추후 글로 배운 것이다. 심지어 6·15 공동선언의 의미와 함의에 대해선 또 대학원에 진학해 관련 글을 쓰면서야 비로소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6·15 공동선언에 관한 이해 수준의 변화는 필자만이 겪은 건 아닐 것이다. 지금도 6·15 공동선언을 '정상 수준'에서 머문 형식적인 만남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인식 혹은 이해도가 시기별로 상이 한 것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이해를 위한 상황 및 지식수준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 학업이 제일 우선시 될 때하고, 대학교를 졸업해 남북교류·협력 실무진으로 일할 때 체감되는 6·15 공동선언의 중요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러니하게도 6·15 공동선언을 함께 한 MZ세대보다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온 지금의 중고생들이 남북관계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러니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어중간하게 기억하는 6·15 공동선언보다는 글로라도 제대로 배운 6·15 공동선언이 미래의 통일 그리고 평화 담론을 이끌 지성인들에게 더 유효할 것이다. 즉 좁게는 6·15 공동선언, 넓게는 한반도의 미래는 아는 것만큼 보이고, 정확히 알기 위한 노력에는 밑천도 왕도 없다. 따라서 필자는 6·15 공동선언이 얼마만큼 기억되기보다는 그때의 정신이 지금 세대에서도 역동할 수 있게, 조화로운 남북관계의 민족적 의미와 국가경쟁력 차원의 함의를 다시 살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 지금의 통일교육를 발전시키자.

■ 6·15 공동선언 제2항 vs 통일을 꼭 해야 하나?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방제가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 인정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선입견은 일단 뒤로하고, 해당 조항이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본다. 우선 지금의 MZ세대를 상대로 통일이 필요한지를 물으면, 분명 엇갈리는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든 간에 관통하는 ‘논리’만은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청년들은 통일을 민족의 숙원사업으로 보고 있거나, 반공에 사로잡혀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통일이던 대북 강경책이던

철저히 자신한테 이로울 것 같은 비전과 정책을 지지한다. 기업들 사이에서 MZ세대는 그간 전략적인 세대로 묘사가 되어왔는데, 이런 전략적인 면모는 소비에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꼭 해야 하는지를 묻기 이전에, 통일에 따른 비용과 이익을 논하는 것이 적어도 MZ세대들에게는 더 와닿을 것이다.

이제 다시 6·15 공동선언 제2항을 살펴보자.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우려는 국제정세가 뒷받침되더라도 여전히 잘 사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며 한반도 내 정치적 혼란 또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름하여 통일비용론이 오늘날 청년들 사이에서도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남북 정부 사이에서 합의된 6.15 공동선언의 제2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한의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은 구상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통일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게끔 설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을 꼭 해야 하나? 통일은 민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있어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견인할 당사자는 이를 민족의 염원으로 바라본 기성세대가 아닌, 전략적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이다. 통일에 대한 일차원적인 애정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가 조만간 '통일 운전대'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이기 때문에, 전 세대보다도 더 강력히 통일을 갈망할 수도 있다. 만약 북한의 체제 위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이 애초에 남북 모두가 희망하던 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점진적 교류·협력을 토대로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발전의 잠재성에 주목하면, 통일은 젊은 세대가 그토록 좋아하는 '전략적인 기회'이다. 유일한 양적 발전의 길. 희토류 및 석탄 채굴 기회. 양질의 노동력과 첨단 기술 및 자본의 결합. 통일이 선사하는 경제적 기회는 지금도 여러 이름을 지닌다.

■ 한국의 기성세대에게

감사합니다. 남한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를 알기 전에, 5000년의 역사

를 자랑하는 한민족부터 알려주셔서 한반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공 정서가 깊던 군부 정권 속에서도 통일이 지니는 의미를 계속 환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5 선언을 기점으로 남과 북은 강력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평화통일에 앞서 남북이 한마음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고단하지만, 이웃들을 설득하는 등 계속되는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감사할 일을 하기보다 우리 청년들이 그간 감사함에 보답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북한학을 공부한 30대가 바라본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윤 세 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 수료

■ 내가 기억하는 6·15 vs 글로 배운 6·15

- 전공을 통해 '학습'한 6·15

2000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진행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적대에서 화해로 바뀌었고,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로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가 기억하는 6·15는 대학 이후 학습한 지식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당시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6·15와 관련한 뚜렷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창 시절 남과 북이 교류하고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현실을 체감하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대학에 입학 후 북한학을 선

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15를 학습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15를 기억하는 사람보다 학습한 사람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학습하느냐의 문제, 즉, 교육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돌아보니 제게는 북한학을 전공한 것이 커다란 의미에서 제대로 된 통일교육이었습니다. 충분하게 한국과 조선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6·15 공동선언도 전문을 확인하고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 6·15 공동선언 제2항 vs 통일 꼭 해야 하나요?

- 아직 국가 담론으로 남아 있는 평화·통일

제 주변엔 통일을 '꼭' 해야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직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친구들이 모였을 때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왜 해야 해?'라고 물어보면 당위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위로만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전엔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였으니까 하는 통일을, 요즘엔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통일입니다. 시대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도 점점 달라졌고, 정부도 큰 노력을 통해 시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다른 당위성을 만들어낸 느낌입니다. 통일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즉, 나의 이야기, 친구나 동료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저 먼 곳 어딘가의 이야기,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통일 이야기가 국가 영역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나 평화는 국가에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그런가보다 학습하는 영역으로 느껴집니다. 평화나 통일을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수다가 아니고 지금의 자리처럼 토론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통일만큼은 사적인 목소리가 공적인 언어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유독 통일은 공적인 언어로 사적인 목소리를 덮는, 국가 캠페인 성격이 강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학을 공부했지만, 전공 외의 친구들과 통일 이야기를 한 경험은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 한 이야기도 '그래서 언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전쟁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슨 주식을 사면 되느냐' 등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적 이슈가 있을 때 던져지는 물음이지 일상적인 물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사실 통일이 별로 없습니다.

- 탈분단: 이제 통일이 아닌 '분단'을 이야기 해봅시다

한국에서 통일담론은 분단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단의 해결이 곧 통일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분단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1년 전 제가 속해 있는 평화를 말하는 청년 모임 '청설모'에서 재미있는 모임을 했습니다. 분단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집담회였습니다. '분단은 나쁜 상태인가?', '현재 분단에서 기인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분단에 영향을 받은 존재들은 무엇이 있는가?', '분단의 영향은 공평했나?'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통일이 아닌 분단 그 자체를 이야기해보고 싶었으나, 결과는 통일보다 분단을, 통일 없이 분단을 이야기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의 통일보다 현실적인 분단을 더 생각하기 어려울까? 왜 통일은 가르치고 분단은 안 가르쳤나? 분단 그 자체에는 가치를 적과 아가 없는데 왜 생긴 것일까? 우리가 통일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통일 때문인가, 분단 때문인가?

분단이 일상화되면서 분단으로 비롯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단 이후 한국 사회에서 통일 담론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남북한의 국가 정체성, 법, 통일 정책, 교육,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과 머리와 마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라난 구별 짓기, 이분법, 금기어, 편견, 혐오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단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분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군사주의 문화, 각종 혐오, 병역 갈등 등의 문제가 분단과 연결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분단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통일은 아니지만, 탈분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이야기가 드러날 수 있고, 평화나 통일은 꼭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의 빠른 통일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당연했던 일상을 돌아보고,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통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섣불리 통일로 연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지점에서 6·15선언 2항을 떠올려봅니다. 물론 6·15선언은 통일을 지향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항의 문제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탈분단도 그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2항에 대한 정치적 해석으로 논란이 되었지 그 자체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마치 북한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선 목적지향적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평화와 통일의 관계는?

통일하면 평화가, 평화하면 통일이 떠오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그

리고 이 둘의 관계 혹은 시너지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둘의 관계를 그리고 이 둘을 떼어 놓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갖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였으니까, 같은 민족이었으니까 이러한 당위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하나의 무언가로 결정해야 하고,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반대로 결정된 하나 외에 다른 의견은 사라지고, 다름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개인이 존중받고, 하나의 주체로 각각 온전히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연결하고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하나이거나 같아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달라도 같이. 그런 의미에서 통일은 좀 폭력적이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화는 통일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는 결국 남북 분단, 군사적 대치 등 안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적극적 평화'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평화는 단지 전쟁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적대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영역으로는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이나 경제적 빈곤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평화가 분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 문제는 결국 통일의 문제가 아닌 평화의 문제입니다.

통일과 평화는 짝인 듯 보이지만 사실 갈등적이고 불완전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일과 평화라는 말에 다시 물음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To. 조선의 청년세대에게

만난 적은 없지만 잘 지내는지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는 같이 살기도, 서로 만나기도 했다는데 참 우리는 만날 기회가 없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나지 못하니 오해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해라도 생기면 다행인데 서로에게 관심

이 없어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6·15 공동선언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와있습니다. 생각해보니 6·15를 책에서만 배웠네요. 거기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6·15가 책에 있는 사건이 된 것처럼, 통일도 책에서 배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통일이 싫지는 않은데 또 엄청 좋지도 않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꼭 그런 건지 질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누구보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나를 만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여기선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니 왜 그러냐고 합니다.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통일과 관련해서 경험한 것이 별로 없으니 질문을 던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말이죠.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네요. 그래서 통일이 더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여년 전 6·15 선언 이후 남과 북이 서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통일이 목적인 만남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통일을 떠나서 그냥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통일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만나요.

어쩌다보니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만나면 서로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청년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일단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스물한 살 6·15가 알려주는 MZ세대 공략법

이 용 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6·15의 '추억'과 '기억'

우리는 한반도 공간을 살아가는 당사자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예측은 곧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분석과 예측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엇나가고 또 반복된다. 그러다보니 냉소를 느끼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이유들로 올해 스물한 살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의 감동도 무뎌졌을까.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의 유행을 좇는 MZ 세대에게 6·15는 더욱 따분한 주제다. 오히려 MZ세대는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핵실험 등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부정적이다.

이렇다 보니 기성세대는 MZ세대가 주역이 된 세상에서의 남북관계를

걱정하고 있다. 즉, 6·15를 경험으로써 '추억'하는 기성세대와 지식으로써 6·15를 '기억'하는 MZ세대 간의 인식의 격차는 통일미래상에 대한 우려와 문제로 귀결된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막을 수 없고 통일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좋든 나쁘든 그들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MZ세대가 건강한 통일미래상을 그려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조정할 때다.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6·15가 남긴 의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단으로 억압된 상상력을 일상에서 공유하기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남북 민간교류의 시대의 개막과 금기됐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당시 청년 세대가 주로 향유했다. 비록 지금의 MZ세대가 6·15 즈음과 같은 활발한 인적교류를 경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그 때의 청년들처럼 단순한 상상력을 구체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MZ세대들은 '평양에서 냉면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그렇다면 이 막연한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MZ세대를 공략하는 것이다. 평양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탈지, 열차를 탈지, 냉면을 먹을 때 가위를 사용할건지, 냉면을 먹고 평양에 더 둘러볼 곳은 없는지 등 친근한 접근과 세대 내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가벼워야 한다.

이처럼 통일이 일상의 한 부분 또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공유되도록 MZ세대를 설득하는 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선행으로 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건강한 통일미래상을 부여해야 한다.

MZ세대가 그리는 통일미래상? 통일일상!

비록, MZ세대가 6·15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MZ세대를 향한 6·15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제 MZ세대에서의 통일미래상은 통일이 일상으로 구체화되고 공유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일상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상상해본다.

> 그거 알아? 우리가 베프됐던 날 말이야. 언젠가 홍대에서 놀다가 경의선 막차를 탈 때였어. 너무 신나게 놀았는지 잠이 들었는데 정신 차려보니 황해도 어느 역에 도착했더라. 부랴 부랴 내렸지만 차가 끊겨 돌아갈 수 없었어. 조금은 당황했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너에게 전화부터 걸었어. 조금 늦은 시간이라 전화를 못 받을까 걱정했지만 이내 너의 목소리를 듣고서 안도했어. 그리고 '하루 너희 집에서 재워줄 수 있겠냐'고 염치없이 물어 봤을 때 네가 조금은 퉁명스럽게 잔소리를 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 그래도 마음 따뜻한 너는 '일 없으니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알려 달라'고 이야기 해줄 때 어찌나 고맙던지! 그때 경의선에서 잠들지 않았다면 너랑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을까? 종종 생각하고는 해.

다소 감성적일 수 있으나, 규정하고 인식하는 대로 실체화되길 희망한다. 가까운 시일에는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사자성을 회복하고 통일과 평화가 누구나에게 일상이 되길 바란다.

참 고

- 김연철, 『70년의 대화』 (창비, 2018) p.205~235
- [이인영 “기성세대 ‘평화·통일 서사’ 새롭게 고쳐야” 2021.05.24.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15724 (2021.06.07. 검색)
- [MZ세대에 맞는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2021.04.28. 유코리아뉴스] http://www.ukore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2 (2021.06.07. 검색)
- [“통일, 다큐가 아닌 예능으로 봤으면”…MZ세대 위한 ‘통일부 워크숍’ 2021.03.02.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30219184706302 (2021.06.07. 검색)

MZ세대,
앞으로 어떻게 대북사업을 그려갈 수 있을까?

정 다 와 (사)평화3000 간사

2000년 ~ 2021년 새로운 세대, MZ세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그때, 연도 앞자리가 1에서 2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왔다. 바로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진 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나의 기억 속에 6·15 남북공동선언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 평양시민들이 꽃을 들고 열렬히 환호하며 서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본 것 외에 다른 기억은 없다.

나는 당시 대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6·15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을 더듬어보았다. 나는 IMF사태를 겪으며 대학생이 되었고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고 등록금도 보태야 했다.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였지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 평화와 같은 거창한 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2021년 나는 또 새로운 세대를 본다. 내가 겪었던 사회의 부조리함,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오늘날 2030세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꿈을 꾸고 꿈을 그려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 불공정, 불합리, 좌절, 차별을 경험하며 사회에 나온 이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통일이 무슨 관심사이겠는가.

나는 대북민간단체 활동가다

2016년 (사)평화삼천에 입사했다. 취업을 위해 채용공고를 찾던 중 '해외사업팀 간사 채용'이라는 문구만 확인했을 뿐, 이 단체가 대북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채용이 되더라도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다.

입사하여 단체 상황을 살펴보니 내 일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다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조금씩 대북업무에 대해 이해도가 쌓이게 되었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리 단체는 2003년부터 다양한 대북사업을 진행해왔다. 여러 정부를 거치며 각 정부의 대북지원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북사업을 묵묵히 해오고 있다.

지난 보수정권을 지나며 대북사업은 대폭 줄어들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이제는 다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위축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사업의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북한은 외부와 교류의 문을 닫았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어온 북측과의 채널도 이제는 거의 끊겼고 남북이 각자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대북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북사업은 인도지원, 보건의료, 농·축산, 환경·산림, 사회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대부분 북한의 식량생산성 증대, 보건의료시설 확충, 식량난과 수해로 인한 인도지원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사업의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인도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개발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새로운 대북사업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물론 현재는 갈 길이 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UN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참여하고 있으나 남측 민간단체와 북측 파트너 모두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은 외부와 교류의 문을 닫고 있어 언제쯤 남북 간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북민간단체에서는 새로운 대북사업의 접근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Peace Maker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 남북은 많이 달라졌고 남쪽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큰 관심사가 아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대북지원을 한다고 하면 퍼주기 논란으로 뭇매를 맞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북민간단체 활동가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 이후 남북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군비를 확충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쟁과 대립의 위협, 상호 적대시하며 불신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앞서 말했듯이 대북사업은 경제, 사회, 체육, 예술,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남북의 인적교류, 기술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기에 남북 교류가 재개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사업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Z세대, 대북사업을 부탁해

나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갈 대북사업에 대한 기대를 해본다. 물론 대북사업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MZ세대만의 감성과 시선으로 대북사업을 이끌어가고 한반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주길 부탁한다. MZ세대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글로벌한 스펙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국제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대북사업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며 한편으로는 선배들이 일궈온 대북사업의 행보와 그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존중해주길 바란다. MZ세대, 한반도의 평화와 대북사업을 부탁해!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 2세션]

“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의 현주소 ”

■ 사　　회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전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 패　　널
-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진희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북한연구학회장

6 · 15공동선언 21주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과 남북경협

권 영 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

1.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6·15공동선언의 의미[1)]

○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전개되어왔던 남북경협의 애로와 제약요인들을 타파하고, 이후 남북경협의 범위가 일반교역、위탁가공교역→관광협력、투자 협력、인프라 협력→개성공단사업 등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게 하는 주춧돌이 되었는데, 남북경협의 역사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첫째, 통일을 목표인 동시에 '과정'으로 보고,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실제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신이 담긴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이후 10년 동안 실행되지 못하고 있던, 제3장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제15조~제23조항) 합의 내용들이 드디어 실제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임.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화해、협력단계에 적용되는 잠정성을 지닌 조약으로도 평가받기도 하는데,[2)] 6·15공동선언은 이의 경제분야 실천계획

1) 권영경, 수은 북한경제(2020년 여름호),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회고와 전망" 일부 발췌.
2) 이장희외, 「남북한 평화·협력 관련 주요 합의문서 해설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책연구

을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표 1>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 합의 내용과 6·15공동선언 이후 전개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6 · 15공동선언 이후
【제22조】 남북 경제교류·협력 위원회 등 구성·운영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 이행을 위해, 합의서 발효 수 3개월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3차례 개최 - 2차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 남북농수산협력공동위원회 등 각 부문별 위원회 구성 및 회담
【제23조】 남북 교류·협력분과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 남북산림협력 실무회의 등 각급의 경제분야 실무회의 및 회담
【제15조】 경제 교류와 협력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	-물자교역량 증대, 내륙투자, 금강산투자 확대, 개성공단사업 개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합의서」를 채택, 미발효
【제16조】 여타 분야의 교류와 협력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	- 여러 분야로 교류 · 협력 확대 실시 -주로 남측인사들의 북한지역 방문행사(평양, 금강산지역) 위주의 한계, 쌍방향 교류 미흡
【제17조】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미실현(개성공단 방문자들의 출퇴근 버스 운영)
【제18조】 이산가족의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방문 및 재결합 실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제3국상봉, 서신교환, 화상상봉, 19차례의 대면상봉 실시, 이산가족면회소 완공(2007). -자유왕래 및 서신교환, 고향방문 미실현
【제19조】 철도, 도로 연결 및 해로, 항로 개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	-경의선,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통(2002), 금강산 육로관광(2003) 실시 -서해상 남북 직항공로 개설 -남북 각각 7개 해로 개설

06-5 보고서(2006.12), p.5.

【제20조】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의 설치·연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연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보장	- 직접, 우편・통신 미실현 - 개성공단내 간접방식으로 KT 설치
【제21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경제·자원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문제 협의 -제3국에서 북한경제・과학인력 교육 일부 시도

* 자료: 조성렬(2006.6.12.), p.63 일부 수정 참조.
* 주: 제22조, 제23조항에 해당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부문별 공동위원회, 각급 분야별 회담 및 실무회의 등이 6・15공동선언 이후 2015년까지 총 127회 개최됨. 자세한 내용은 최영윤외(2018.5), pp.70～73 참조.

- 둘째, 6·15공동선언의 제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에 등장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개념은, 단지 단절되어 있는 남북 두 지역 간에 경제교류・협력을 행한다는 기존 남북경협 개념을, 지경학적 차원에서 한반도 전체를 조망해보는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음.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경학적 능력은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축 기능인데, 분단경제 하에서 남북한은 각기 분절된 ‘섬 경제’(Irand economy)라는 지경학적 상황에 처해 있음으로써 성장동력에 기본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고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셋째, 6·15공동선언은 체제불안 상태에 있던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변화와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그동안 방어적 자세에서 수동적으로 응해왔던 남한의 경제협력 요구를 정식으로 남한을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도록[3] 하는 인식의 변화, 경제정책의 변화 등을 유도하였음. 북한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

3) 이는 1999년말 북한 내부에서 보수-개방파(?)간의 논쟁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보임. 북한은 이 논쟁의 결론으로 “남조선을 활용해 경제난을 해결하는 한편, 내부 단속은 더욱 철저히 강화한다”라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함.(최원기, “남북접촉 막전막후 500일 드라마”, 「월간 중앙」2000년 5월호, pp.114～115) 이후 2000년 5월 북경에서 김정일과 만났던 탕자쉬엔 중국 외무장관이 “과거 김총비서가 미국을 위주로 한반도 문제를 보는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이젠 한반도 문제가 한민족 내부 문제로 남북한 쌍방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중앙일보, 2000.6.3.)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후 시장화 현상을 부분 수용하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 나선, 금강산, 개성공단 등 4대 경제특구 정책을 시행해 나갔고,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기도 했음. 물론 북한의 경제난 지속으로 인해 남한의 재원 투입하에 남북한 인프라 연결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민간기업들의 경협사업에 있어서도 비경제적 기회비용이 초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얼마 동안 지속 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있었음. 그러나 2000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건설을 결정한 이후[4] 2005년부터 각기 우위성을 갖고 있는 생산요소를 결합한(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어 나감으로써 상호 윈-윈의 경제협력이 가능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2.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경협의 재개 기대의 현주소

○ 6·15공동선언은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에 기초한 상생·번영의 공존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남북경협을 통한 대북 개입전략(engagement strategy)을 최초로 추진 가능케 한 선언이었음. 그러나 한반도의 진성적 냉전구조와 정전체제가 타파되지 않는 속에서의 남북경협의 추진은 통계적 수치 확대와 현상적 활성화와 다르게 언제라도 역진될 수 있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으며, 결국 주지하다시피 2016년 2월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회귀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 냉전적 갈등구조에 북핵·미사일 문제까지 중첩되어있는 구조적 현상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게 되었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

4)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당시 대북사업자였던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이 처음 언급했고, 이후 이를 우리 당국자도 수용해 개성공단사업은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어 나갔음.

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통한 경제협력과 평화가 선순환되는 신경제협력질서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의 발휘를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을 유례없이 병행적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남북경협의 재개는커녕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개념적 구상'에 그쳤을 뿐 분단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음. 4·27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인 남북연락사무소마저 2020년 6월 북한에 의해 폭파되고 말았음.

ㅇ 남북관계가 재차 대화·협력의 제로시대로 회귀하고 남북경협의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이유는 몇 가지 면에서 추산해 볼 수 있음.

- 우선 첫째, 2017년 2397호 대북제재 실행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에 완전한 종속변수로 되어 그 자유도가 거의 사라져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임. 1990년대 초 1차 북핵위기 발발 이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은 2016년도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의 롤러코스터가 있었고 대립과 갈등도 존재했었지만, 그 지속의 동력은 유지되어왔다고 할 수 있음. 특히 1990년-2016년 간 27년의 남북경협의 역사를 보면, 국지적인 남북 간 군사적 갈등, 북미 간 갈등 속에서도 남북경협은 당분간 위축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재개되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2017년 강력한 대북제재 시행 이후 남북경협은 더 이상 '민족내부의 경제협력'이라는 특수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졌으며, 국제규범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음. 이는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남북경협정책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면도 있지만, 사상 최대의 유엔 대북제재가 결정적으로 규정시켜버렸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남북관계에 크게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됨.

- 둘째, 2019년 2월 북미 간 '하노이 노딜'쇼크로 북한이 '코리아 이니

셔티브'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가지게 된 것도 한 요인이 아니지 않나 생각됨. 물론 북미 간 하노이 회담은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논의되고 타결되지 않은 채 정상 간 만남에서 동상이몽의 상호 원하는 바를 언급하는 방식에 근본 문제가 있었지만, 북미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신호전달의 매개체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특히 북한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 셋째, 김정일정권과 다르게 김정은정권은 '우리 민족끼리'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인식하기보다는, 전반적 대외관계의 스펙트럼 속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고 생각됨. 이를 놓고 김정은정권이 'two-korea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들이 존재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통일지향적 방향성 속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대외관계의 1/n 로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관찰됨. 물론 이는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불신의 관계가 반복되는 학습효과일 수도 있지만,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신냉전구조 속에서 스스로의 전략적 위상을 구축하려는 의도에 무엇보다 우선 집중함으로써 초래된 상황일 수도 있음.

- 넷째,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신속하게 조성하며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문제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됨. 2018년 4·27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선언 이후 우리 시민사회는 남북 간 민간교류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표출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를 기대하며 다소 신중한 자세였던 측면이 있었음. 지난 몇 십 년간의 남북관계를 현장에서 관찰,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남북관계는 틈새 같은 공간과 상황이 만들어질 때마다 접촉과 교류의 기회를 신속히 누적시켜 '지속의 동력'과 '접촉의 네트워크'를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매 순간 어려움과 난관이 존재하지만,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창의적 교류·협력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

3.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새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calibrated practical)을 내놓고,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정부의 일괄타결 달성에도 초점을 두지 않을 것”(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라고 밝힘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접근에 빅딜이 아닌 스몰딜,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접근으로 해석 가능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이런 기조 위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① 2018년 북미 싱가포르선언과 남북 간 판문점선언의 기초위에서, ② 외교와 대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며, ③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음.

○ 이는 남북 간 협력이 북미 간 비핵화협상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고, 한미 간 굳건한 공조하에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병행 가능함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됨. 즉 제재의 예외조항이나 비 제재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이 한국이 주도성을 갖고 추진할 공간이 얻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문제는 남북 간, 북미 간, 혹은 남·북·미 간 대화 테이블로 북한을 어떻게 유인하여 다시 싱가포르선언과 판문점선언의 동력을 이어나갈 것인가의 문제임.

○ 남북관계 측면에만 집중해서 고찰해 본다면, 통일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 1일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의 면담에서 금강산 남북 공동개발 구상을 마련,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바로 언급한 바 있음. 이런 상

황에서 북한이 2018년처럼 다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인정할지 의문임.

- 북한은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 중 남북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며, 비 제재 분야 중심의 남북 간 협력을 거부한 바 있음.

- 그리고 올해 3월 15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에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 남한당국과는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도 예견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1월 초 8차 당 대회에서는 대남비서직을 없앴음. 현재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내용을 아직 현실화하고 있지 않지만, 자칫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이전을 넘어 6·15공동선언 이전의 시대로 회귀시킬 가능성을 예고해 놓은 상황임.

ㅇ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남조선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1월 초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비관적 전망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 현재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적대정책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이래(3월 17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 담화), 외무성 대변인 및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5월 2일), 조선중앙통신 국제평론가 개인필명 논평(5월 31일) 등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지속 주장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당분간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고 있음.

- 북한은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선포하면서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의 장기 체제 유지전략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1월 초 8차 당대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경제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음. 즉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세변화가 올 때까지 일종의 ‘버티기 전략’혹은 ‘북한판 전략적 인내정책’[5]을 추진하면서,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체제단속과 국가통치체제 재정비, 사회통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북한이 2018년 대외정책 전환실험(문재인 대통령 평양연설 포함)과 2019년 하노이 쇼크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파장이 커서 ‘내부체제 다지기’가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음.

ㅇ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도 상황으로의 재부팅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현상적으로 현재의 구조적 상황 타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는 7월 11일 북중 간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 행사를 상징으로 하는 북중관계의 향방, 코로나백신 도입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보건협력 문제, 본격 대북제재 5년 +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초래되고 있는 경제위기에 얼마만큼 내구력을 지닐지 여부 등에 따라 예측해볼 수 있다고 생각됨. 과거의 경험처럼 돌발변수에 의한 남북관계 재부팅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우리는 북한이 대중국 의존도 제고 속에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방향성이 관성적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창의적 재부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평화재단 현안진단(2021.5.17.)

4. 남북경협의 미래와 남북민간교류의 과제

○ 남북경협은 현재 남한의 남북경협 중단조치(5·24조치) 즉 양자제재의 굴레 외에 유엔대북제재라는 다자제재의 구도 속에 이중적으로 갇혀 있음. 남한의 양자제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대량의 현금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 14항, 2270호 36항, 2321호 35항 등)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북한으로부터의 물자 수입금지를 규정한(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미국제재법 H.R. 3364) 항목들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음.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미국의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도 남북경협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

○ 그러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추진되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남북경협 시계 제로의 상황에 멈춰서 있어야 할까?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각기 자국의 이익에 따라 유엔제재를 우회하거나 빈 공간을 활용해 북한과의 경제협력동력을 지속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남북경협을 제약조건들의 종속변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강고한 이중 냉전구조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타파해나가는 전략수단으로서 인식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남북경협은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평화정착과 선순환되는 패러다임으로 지향될 필요가 있음.

- 남북한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의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특구 조성 등에 합의한 점은 고무적이었지만 이를 제재국면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비핵화 프로세스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나갈 것인지 창의적 고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남북경협의 미래는 북한경제권을 국제 가치사슬체계의 한 분절로 편입시키고 한반도 전체 경제권과 여타 경제권과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

축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북한은 김정은정권 등장 이후 경제개발에 목표를 두면서 개발방식의 경협에 선호적 입장을 종종 나타냈었음.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2018년 평양에서 만난 북한 고위 간부들은 30대 중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나이가 40대가 될 때까지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영원히 뒤처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은“이제 경제개혁 기조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함. 그런 면에서 8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지만, 이는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변화의 여지가 있는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남북경협 재세팅의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음.

ㅇ 남북한 경제협력과 함께 남북 민간교류는 오랜 분단으로 이질화된 민족 간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 재통합의 초석들을 놓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음. 초창기 민간교류는 분단의 장벽을 세워놓은 정치적 벽을 아래로부터 타파하려 한 민간운동으로부터 출발해 대북인도지원의 중심 역할→간헐적인 남북 당국 간 긴장 완화역할→지역 개발협력 실험을 통한 남북한 상생 번영의 실험적 역할 등으로 경협 27년의 역사만큼이나 진화되어 왔으나, 남북 간 경제협력처럼 과거의 동력을 현재 찾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남북관계 중단의 배경과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과거 동서독처럼 남북한 관계에는 정전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정치적 공간에서조차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민간교류의 공간이 결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

ㅇ 따라서 남북 간 민간교류는 민족동질성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적대적 대결관계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사료됨. 게다가 분단의 장기화로 남북 각기 새로운 세대들의 민족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달라져 있고, 문화와 삶의 양식도 상당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남북한 통합의 핵심 기저에 당연히 같은 민족이라는 토대가 구축되어야겠지만,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것이 낯선

개념조차 되어가고 있음. 그러므로 남북한은 운명적으로 삶의 공간이 지리적으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생존을 이어가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민간교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과의 민간교류에서도 이러한 신 패러다임에 의거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됨.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한 관계의 대외적 조건

김 흥 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1.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원칙과 경과

○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흡수통일과 대결 정책에서 북한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임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간의 공존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는 북한 정권의 해체에 초점을 맞춘 흡수통일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이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전쟁의 위험 감내라는 과도한 비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전제한 통일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가 핵전쟁으로 치달을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이익이나 민족의 생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임
-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경쟁의 동향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에서, 불가피한 외세의 압박을 극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서 북한과 공존에 기반한 평화를 수립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접근법이었음

○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제시.[1] 문재인 정부의 100대 추진과제 중 95번째 과제가 외교부에 할당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임[2]

○ 북핵문제가 최대로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시기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여,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3]

- 베를린 구상의 5대 기조는 ▲평화추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한빈도 신경제지도 구상, ▲교류·협력
- 4대 제안은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분계선에서 상호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간 접촉·대화 재개였음

○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2월 동계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2월 9~11일, 2월 25~27일),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등이 이뤄지면서 2018년 한반도 '해빙의 해'를 열었고,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음

○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 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4.27.)], 싱가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2018.6.12.)와 4대 합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평양방문과 평양 군중 앞에서의 연설, [9·19 평양공동선언(2018.9.19.)]이 이뤄졌음

-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 ▲남북은 2018년 종전

1)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8). p. 21.
2)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 2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서울: 대한민국정부, 2019), p. 14-17.
3) Ibid. p. 358.

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

-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확약, ▲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 발굴과 송환을 약속하였음
-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 공유,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북한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 추가조치 용의 표명,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남북 9·19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여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하였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여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남 및 대미접촉에 나선 배경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제안과 접근 정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주목할 요인이 존재함

- 북한의 핵무장 역량의 자신감임. 북한은 이미 수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 '확증보복에 의한 억제' 역량을 확신함. 남북 및 북미 회담 자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억제할 수는 없으며, 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작업은 진행할 수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전략가들은 중국의 대한 압박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대중국 압박을 위한 지정학적 우호 협력국가화 하기를 희망하였고, 북한에 대한 타진을 시도. 이는 1970년대 초 소련의 공세에 압박받던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보좌관이 추진한 소련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데탕트 정책과 유사한 발상임. 단,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국내의 저항이 워낙 거세 초반에 실패.
- 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압박임.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후진타오 정부와 달리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 설정을 강조하고,[4]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을 강화. ▲압록강변에서의 군사 연습, ▲내부 토론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부정 발언 허용, ▲한미동맹론의 등장 등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여나갔음, ▲2017년 11월 중국 제19차 당 대회 설명 명분으로 중앙대외연락부 부장 쑹타오를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설득.
-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나친 긴장 고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재 국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경제 제재의 수준을 낮추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 정통성과 위신도 강화

2. 반전의 시작: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 우리의 대북 전략,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미중 전략적 협력 시대의 유산을 강하게 전제하고 있음. 미중 전략적 협력의 시대에는 북핵과 북한 문제가 미중 간의 주 협력대상이었음. 따라서 남북 간의 자율적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었고, 중국이나 미국도 어느 정도 남북의 합의 여하에 따라 관용적이었음.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동의 가능성도 낮았음. 미중은 각기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남

4) 시진핑 시기 중국 내부의 북한에 대한 복잡한 관점은 龚克瑜. 『朝鲜半岛局势与中国』, (서울: 新星出版社, 2018). pp. 25-31; 김흥규 & 과숙한, 「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신아세아』. Vol. 22. No. 4호 (2015)

북한을 억제할 수 있었음. 그러나 2019년 이후 다음 세 가지 새로운 주요 변수가 등장하였음

-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도래
- 바이든 시대의 도래
-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전술핵 보유 등 군사적 공세성과 '핵무장국'으로서의 군사적 목표의 수정

○ 이러한 변화로 당장 영향을 받은 것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임

-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율적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짐.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불가측하고 불안정한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국의 경제·정치적 지원과 중국의 경제·군사적 위협과 교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은 그간 거부해 왔던 중국 방문을 다섯 차례나 단행하면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미북 대화를 통해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assurance를 분명히 하고, 미국의 전략적 게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
- 미국 역시 기존에 구상한 '북한을 통한 중국 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조치가 국내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자 하노이 북미 담판을 깬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7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출간하여 기존에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두었던 대중 정책을 '전략적 경쟁'으로 전환하였음.[5] 그 이후 미국은 무역분쟁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과학기술, 이념·체제의 갈등 등 전방위적으로 대중 갈등과 충돌을 확대하였음

---

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ashington D.C.: The White House, 2017). Available at: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17/12/NSS-Final-12-18-2017-0905.pdf

-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COVID-19는 미중 간의 경쟁을 휴전으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확산하고 악화시켰음
- 미국은 COVID-19사태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고, 중국의 미국과의 경쟁에 대한 자신감은 상승하였음

<표1> 주요국 Covid-19 대응 상황

	세계	미국	중국	한국
확진자	141,407,599	32,361,280	90,499	114,115
사망자	3,026,333	580,756	4,636	1,797
완치자	120,220,417	24,909,770	85,549	104,006
사망률(%)	2.14	1.79	5.12	1.57
완치율(%)	85.0	77.0	94.5	91.1
발생자(백만명)	18,141	97,315	63	2,224
사망자(백만명)	388.3	1,746	3	35
검사(백만명)	?	1,287,450	111,163	163,652

출처: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2021년 4월 18일 현재)

○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의 미중 전략경쟁은 점차 장기전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2020년 7월 30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규정.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비에 돌입. 2020년 10월 개최된 19차 공산당대회 5중 전회는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전이라고 규정한 중국의 대응책을 정리해서 보여 줌.[6)]
- 미국 역시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21세기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경쟁으로 정의
-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는 북핵과 북한 문제가 미중 대립의 주제로 전환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적어도 미중 간의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

6) 그 공보는 다음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81878650959407819&wfr=spider&for=pc

응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이는 신냉전에 편승하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다소 신중하고 소극적인 자강 전략으로 귀착하고 있음.

- 핵심은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임. 미중 전략경쟁이 가져오는 위험과 비용을 일단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일단 벌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임. 금년에 공개한 북한 중기 경제 개발계획도 자력갱생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여, 대미 억제 역량을 물론이고 공세 역량도 동시에 확보해 미래 기회의 창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임
-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미·일의 압박이 진행되면, 북한이 결국 의지할 세력은 중국과 러시아임. 이들과 일정 정도 우호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만일의 국제정세 진전에 대해 대비하는 것임
- 이러한 북한 전략의 핵심에는 사실상 중국의 점증하는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임. 중국 중심의 과학·기술·경제 플랫폼에 들어가면, 북한의 자율성은 급격히 제약을 받을 것임. 북한은 현재 이를 거부하고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는 단지 한미에 대한 대응과 공세의 측면도 존재하지만, 더욱 절실하게 대중국의 대응책 측면도 존재함
-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미중 어느 누구도 무리하게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당분간 요원하며, 상기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도 북한은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임

○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사업총화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거의 게임체인저의 등장이라 할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전술핵의 배치라든가 다양한 단거리 핵미사일의 존재는 한반도 상황이 기존의 “민족평화통일체제”에서 “양국가 무력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음. 북한 핵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방어용이 아닌 언제든 김정은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해 사용 가능한 공세용 핵으로 전환 가능함. 이 변수가 어떻게 한반도 상황과 동아시아 국제정치에 작동할지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

- 북한은 2020년 6월의 남북관계 단절선언 이후 2021년의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남북관계의 활성화는 전적으로 한국에 달려 있다는 입장(국제적 제재 이탈, 한미 연합대비태세 약화 등)

○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역시 한반도 상황에 주요한 변수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고 공개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 주제에 대해 과연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핵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 북한에 대한 신뢰와 기대치는 대단히 낮아 대담한 접근이 어렵고
- 현재 해결방식은 단계적인 접근법에 입각할 것이며,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보다는 결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축적인 접근을 할 개연성이 다대함
- 국내정치 여건상 북한과 북핵문제는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딜레마는 현 시점에서도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 북한은 4월 8일자 김정은의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내외적 난국에도 기존 노선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버티기’를 통해 전략적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산
-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상황 악화 방지에 중점을 둔 ‘단계적 접근’이 취해질 가능성도 있으나 대한반도 정책의 근본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적으로도 남북대화 경색의 국면이 장기화됨에 따라 평화체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미약

3. 미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

○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북한에게는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은 분명. 비핵화와 “Bottom-up” 접근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과도 만만치 않은 기 싸움을 예고.

-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까지 묘사한 것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7] 실무선에서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미·북 협상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증대.
- 비확산을 중요시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 상당수가 이미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의 실체를 경험했던 새로운 외교·안보 참모들의 진용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력의 지속 강화’를 시도하는 한 제재와 같은 대북압력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추정.

○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 연대’(Coalition of Democracies)을 강조.[8] 이는 자연스럽게 권위주의/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공동의 대응과 동맹·우방국들 간의 상호 연계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임.

-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북한에 유화적이거나 양보적인 조치, 특히 대북 제재의 조기 완화나 해제를 협상카드로 들고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음.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실무차원의 미·북 대화가 시

7)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럼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지는 피력했다. Paula Hancocks, “From love to thug, what President-elect Biden means for North Korea,” *CNN* (November 15, 2020).

8) 이에 대해서는 Joseph R. Biden,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Vol. 99, No. 2 (March/April 2020), pp. 64-76 참조.

작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9)]

- 최소한 2021년 1월 20일 이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빠르면 2021년 하반기 들어서는 6-7월경부터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트럼프에 비해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제시될 수 있음.

4. 북한 생존 전략과 남북관계

○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한은 다음 세 가지의 대응 전략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보임.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존'을 우선으로 하는 자력갱생이 위주

- 북한 현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은 '불안과 공포' 그 자체임. "불안과 공포, 돌풍과 재앙으로 요동치는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계"라고 2020년 6월 29일 노동신문은 묘사하고 있음
- 북한은 스스로의 역량 확보 이외에는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심각한 '신뢰부족'과 '안보불안'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 '전략경쟁' 시기에 북미관계 개선과 같은 무리한 변화 시도는 더 위험함. 미국은 신뢰할 수 없고, 중국의 보복을 감당하기 어려움
- 미중 전략협력의 시기에는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공간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탄 발사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군중에 대한 연설 허용, '부분적 비핵화 안' 등 중요한 실험을 시도하였으나, 그 해부터 미중 간의 구조적인 경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미중은 모두 북핵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를 미중 전략경쟁에 활용하려는 데로 정책 우선순위가 전환되었음. 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임.

9)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무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副장관은 2020년 12월 10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특강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측이 실무선에서도 많은 대안에 대해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못 했음을 지적하면서 차기 미 행정부에서는 Bottom-up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는 구조가 제약하는 비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여 당분간 어려울 것임. 안보-안보 교환방식이나 안보-경제 교환방식 모두 작동하기 어려움. 북한 역시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성을 전제하고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해야 함
-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과도 회담 진행. 이들 역시 미국과의 갈등을 전제하거나, UN 제재를 파기하면서 북한을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대한국/주한 미군 군사역량에 대한 주도권 확보, 핵무기 역량의 확고한 보유

-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8년 신년사 및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무장의 완성을 선언. 그 자신감이 2018년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라 생각함.
- 김정은 위원장이 2018-19년 체감한 국제정치는 정글의 세계임
- 주목할 것은 향후 예상되는 중국 경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할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임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방향은 단거리/중거리탄도미사일(SRBM/MRBM),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다 다연장 방사포까지 다종화 및 다양한 사거리 능력 보유
-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본격적으로 대한국/주한 미군 군사역량을 위협할 재래식 무기(초대형 방사포) 및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RBM 개발 및 시험 발사하였고, 한반도 군사문제를 주도할 의지와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했음
- 북한이 다연장 발사관을 이용하여 다수의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초대형방사포(KN-25)를 개발하여, 저고도의 다양한

비행궤적을 통해 다종의 SRBM과 동시에 발사하면 현실적으로 한국과 주한미군이 어떠한 전략 자산을 가져다 놓아도 요격은 거의 불가능함. 이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미중 전략경쟁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보증하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견제 수단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는 중요하다고 인식.

- 북한은 최근 들어 부쩍 중국과의 전략적인 유대를 강조. 중국의 “한 참모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북한의 생존 전략의 일부
- 물론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상황은 아님. 북한에 의한 연루상황을 중국은 우려

○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코로나-19사태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미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놓고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점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봐도 좋을 것임

- 최근 미국의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명들이 사라지고 있음. 이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분위기. 이는 북한이 의도한 북핵 기정사실화 전략이 일단 성공하고 있다는 증좌임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는 한국 정부의 희망대로 북한과 협상은 가능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실무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선제적 양보 없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임

○ 북한의 생존전략 중심의 방향설정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남북한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희망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및 기대와는 확연히 결이 다름

- 이 상황은 정책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보다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음. 우리의 노력으로 해

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임.

- 무리한 대북정책의 추진은 우리의 입지를 오히려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효과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직선만이 목표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님

5. 바이든 행정부의 미·북협상: 대립 혹은 또 다른 타협?

○ 바이든 행정부의 미·북관계 전망에 있어 대북제재의 지속 여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음.

-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2016년 이후의 대북제재 강화 과정에서 북한 '민생경제에의 타격'을 주장하며 반대 논리를 폈던 것을 생각하면 국제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그리 높지 않음.
-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무기가 있음. '세컨더리 보이콧'은 한 마디로 미국 관할권에 속해있지 않는 제재대상의 미국 시장 접근을 막는 것으로, 미국과의 거래가 많지 않은 제재대상에게 타격을 입힐 때 활용될 수 있는 조치. 북한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해있지도 않고 미국과의 거래가 미미하여 북한에게 직접 타격을 입히기는 힘든 것이 사실. 미국 내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있으나, 이 역시 차명(借名) 계좌 등을 이용하기에 입증이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은 것이 현실.

○ 만약 북한과 거래가 많은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중국, EU, 동남아)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경고하면 이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게 될 것임.

- 이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및 국제금융거래에 타격을 주는 효과를 노린 것. 또, 북한이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이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이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음.
- 세컨더리 보이콧이 본격화된 것은 2016년부터이나 이때 제재대상

으로 지정된 제3국 기업과 개인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 2020년 10월,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본격적인 대북제재 리스트는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실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강화는 북한과의 타협 여지를 남겨두려는 트럼프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대북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임.

○ 두 번째는 제재의 격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성실한 제재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제재를 우회하거나 회피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하는 행태가 지속하였음.

- 2019년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의하면 불법 환적(換績) 등을 통한 대규모 물자 유출입이 북한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UN안보리가 제한을 둔 석유 정제품의 경우 이 불법 환적 규모가 5만 배럴 규모(한화 64억 원 상당)에 이르렀음. 이 거래는 선적(船籍)과 선체를 모두 위장해 진행됐으며 세계적 유력 상사(商社)와 미국·싱가포르의 은행, 영국의 보험회사가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20년 3월 9일, New York Times는 2020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 UN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과 모래, 석유 등을 팔아 방탄차, 주류, 로봇기계 등 사치품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음.[10]

○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의 입장.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정책을 존중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수준과 속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한국이 대북제재의 범위 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나,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

10) "Armored Cars, Robots and Coal: North Korea Defies U.S. by Evading Sanctions," *New York Times* (Marth 9, 2020).

서 한국이 대북 제재의 완화·해제를 요구하거나,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보다 오히려 강경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도 주의해야 할 것임.

- 북한의 추가적인 핵 능력 발전을 억제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전환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season 2가 진행될 수도 있음. 만일 이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에만 관심을 둘 경우, 중기적인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본토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우선적인 중점을 두는 핵군축회담 카드를 검토할 수도 있음. 즉, 바이든 행정부 내의 '군축론'이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임.

○ 사태 전개에 따라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강경대응이라는 에스컬레이션을 불러올 수도 있음.

- 2020년 중 동북아 차원에 파문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북한이 하지 않았던 데에는 내부 사정도 작용하였으며, 이는 두 가지를 암시.
- 내부적인 3중고로 인해 남북한 관계에서의 강경한 태도를 제외하면 역내 질서에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임.
- 이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체제내구력이 여전히 위험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만큼 국내적인 이슈들의 해결이 급선무였고 심각하다는 점을 이야기
- 북한의 입장에서 2021년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이었음을 암시하기도 함. 2021년 하반기에는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것임

토 론 문

성 기 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장

1. 한미정상회담 대북정책 분야 평가

○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정책의 공동검토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100일 직전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thorough, rigorous, inclusive)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과거 대북정책과의 단절, 차별화보다는 정책의 계승과 연속성을 강조

※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통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2/4), 쿼드 화상정상회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3/12), 블링컨 장관 “北, 자국민 체계적인 학대”(3/17), 한미일 안보실장 “유엔 결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4/2)

※ 미 고위 당국자 “싱가포르 합의 중요성 이해”(4/1, teleconference)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 촉구”(4/21, NYT), 고위 당국자 “싱가포르 합의와 이전 합의 위에 성과를 쌓아가는 것”(5/1. WP)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관여 의지 표명

- 성 김 대북(DPRK)특별대표 임명 직접 발표·인권특사 임명 유보·CVIA 언급(G7 공동성명)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형식이 아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work together)’을 강조

※ 설리반 보좌관 “적대가 아닌 해결”(5/2, ABC), 블링컨 장관 “incredibly hard problem”(5/3, G7 기자회견), “공은 북한에”(5/24, ABC)

※ 스티븐 비건 前 부장관 “It'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much of what's been tried in the past” (6/3, Arms Control Association)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 표명

-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기초한 외교적 대화 지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 표명, 대북 인도적 지원 촉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 대북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하도록(coordinate in lockstep) 합의

- 미국의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인준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인식적 기반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

2.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쟁점

○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은 향후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한 세기적 만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싱가포르회담을 바이든 행정부가 추인했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외교적 액션으로 평가

○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 북한 내부요인 △ 남북관계 내재 요인 △ 대외요인으로 나누어 관찰할 필요

- (북한 내부요인)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 행사(20/10)와 8차 당대회(21/1)를 통해 자력갱생, 이민위천, 일심단결 등을 내세워 경제 재건과 내부 기강 단속에 주력

- 6월로 예고되어 있는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전략에 대한 전향적 방침이 등장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호응하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

- (남북관계 내재 요인) 북한의 대남 대적(對敵)선언(20/06) 이후 1년 동안 대남 비난 횟수는 줄었으나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

- 북한의 대남무시 전략과 내부지향적 국가노선, 코로나19 상황 등이 개선되거나 호전될 때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대외요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은 북중관계 의존을 통해 대외전략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 역시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동지들과의 협력’ 강조(3/23, 구두 친서)

- 대미관계 재개 가능성을 ‘강대강, 선대선’(1/5 김정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으로 열어놓고 남한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만큼 상대’

방식으로 더욱 유보적 태도 표출

※ 김여정 부부장은 3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남 경고(3/16)하며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관 폐지 가능성도 시사

○ 2018년 이후 남북관계 정체 요인은 △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남 무시 전략 △ 북한의 내부지향적 국가전략 노선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 △ 남북관계 진전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 등으로 집약할 수 있는 바,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견해차는 축소되었고 북한의 대남 태도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부상

- 2020년 6월 연락채널 전면 차단(6/9)과 연락사무소 폭파(6/16)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열쇠는 남북 간 양자 관계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달려있음

-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4/30)와 한미정상회담(5/21) 이후 북한의 반응은 개인 명의 미사일 지침 종료 비판 성명을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

※ 북한의 계산법에 대한 추론

- 노무현 정부 당시 10·4 선언이 정권교체로 인해 동력을 상실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잔여임기 내 남북 간 주요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

- ‘하노이 트라우마’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프레임(19/4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의 역할을 규정

- 8차 당 대회에서 대남라인 관계자들의 당내 위상 약화(대남 담당 비서 공석 유지), 통일전선부장 위상 하락 (김영철 당 부위원장 → 통일전선부장), 김여정의 직책 조정(제1부부장 → 부부장) 등에 주목

- 북한이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공조는 대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으나 북한의 대남 접근을 이끌어내는 데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전략적 지위' 상승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핵보유국 위상에 부합하는 대외전략을 추구

- 북한은 상반기 중 대남, 대미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내지 않고 인민 경제 개선 노력에 집중하면서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향후 대외전략 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

3. 향후 전망과 과제

○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과거와 같은 비난 일변도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나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예상하기는 난망

-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미국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으나 구체적 행동계획은 결여

- 북중채널을 통한 조율을 거쳐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제재 유지 입장이 변화하지 않고 구체적 인도적 지원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

기는 어려움

ㅇ 코로나19 봉쇄가 장기화하고 북한 내 백신 공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남, 대미 공식대화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WHO나 국제 개발협력 기구 등을 통해 대북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히고 북한의 협력을 선(先)유도하는 것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재개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

ㅇ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스필오버 효과를 목격한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통해 북중관계/한중관계를 재가동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음

- 중국 측이 이러한 구상에 나설 경우 미국은 이를 중국의 한미 균열 시도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

토 론 문

전 재 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o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평화

- 남·북·미 3각 관계가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에서 핵심축이며, 그중 한미 관계를 새로운 틀 속에서 안착시키는 효과
- 한미 간 조율과 협의를 통한 북핵,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 노력, 한반도 문제와 미중 관계 등 외교환경의 연결 고리 설정, 미래 이슈에 대한 협력 구도 설정 등의 의미가 큼.
- 미국의 행정부 교체 때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화했던 과거에서 행정부 간 연속성 확보, 과거 행정부의 성과에 대한 선택적 수용 등 한국정부의 역할도 존재

o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논점들

- 대북관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정 속에 한국의 대북

협력 노력이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한국의 노력이 비본질적 이슈들에 대한 접근이라는 북한의 인식 속에 한국이 북미 협상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북한이 생각할 것인가의 문제
- 미중이 비확산 이슈를 협력 이슈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를 협력 이슈로 상정하고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로 보고 지정학 경쟁 이슈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
-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한미 간의 미래 지향적 이슈들을 북한이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도록 상호 인식을 쌓아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
- 북미 협상 재개 및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한미가 북한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 등.

o 한국정부의 미중 관계 외교의 환경

-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아시아 전략이 부재했던 것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치밀하게 기획
- 미국은 중국에 대한 포괄적 견제를 목적으로 자국의 중산층, 경제 강화, 동맹 재활성화, 가치에 기초한 외교, 기존의 바퀴살 동맹체제 진화 등의 모습을 보임.
-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한미 간의 지역 전략 합의의 공통부분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을 추구
- 한국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실익 부분에서 중요한 동맹,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게 미중 동맹/파트너 외교의 성패를 보이는 사례, 지표, 표본과 같은 나라이기도 함.
- 국제사회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의 딜레마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단· 중· 장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함.

o 한국의 가치외교

- 미중 양국 모두 본격적인 전략경쟁, 미중을 제외한 다양한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코로나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이익과 함께 가치를 내세우는 외교를 추구함.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한미 간 이익의 공유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하는 노력을 기울임.
- 향후에도 한국의 공고화된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합의에 기초한 가치를 축으로 외교를 전개하는 한국형 가치외교의 틀을 확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o 중국의 대응 전략의 추이와 한국의 대응

- 중국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역 안보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가능성, 대만 문제의 추이 등을 주목
-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 강조, 북중 연대 강화, 한중 경제/공급망 유지, 발전,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 외교 등을 강조할 전망.
- 한국에 대한 외교적 협력 구도가 효과가 없을 경우, 사용 가능한 압박수단도 함께 강구하고 있을 가능성. 한국은 중국의 지경학적 영향력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연대 및 동맹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지표의 국가이기 때문임.

o 북한은 북미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안보 부문에 기초한 체제보장,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미국과의 신뢰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대한 북미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전제로 협상 재개 및

실무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미 양자 간 새로운 신뢰구축이 중요

-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면서 협상의 단계는 축소하는 효과적인 협상이 중요

o 미중의 경쟁 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외교환경 속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을 고려

- 미중 간 경쟁 구도는 점차 지정학적 대결, 군사안보 분야의 경쟁과 대립으로 확대되는 경향
-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강화되는 추세가 계속될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 약화, 북중 경제관계 긴밀화, 북중 안보협력의 강화 등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음.
- 북핵, 한반도 문제를 미중 협력 사안으로 유지하면서 남·북·미·중 4자, 사안에 따라서는, 보다 넓은 다자 협력 구도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과제

진 희 관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북한연구학회장

1. 시작하며

○ 한미정상회담으로 많은 성과와 함께 백신외교의 새 장을 열었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 존재

○ 싱가포르 합의와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미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 북한의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
: 왜냐하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인데 반해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제안한 바 없으며, 다만 대화를 요구한 것이 전부

○ 요컨대, 한미정상회담으로 추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기에 긍정적인 관계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따라서 한국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

2. 북한의 요구 사항

○ 북한은 명확히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음. 특히 2019년 초, 제재 해제 요구에서 2019 중반 이후 체제보장 요구로 명확히 변화

- (2019.3.15.) **제재 해제 요구 밝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최선희) "우리는 이번에 유엔안보리사회가 2016년 이후 우리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만들어낸 <제재 결의> 제 2270호, 제 2321호, 제2375호, 제2397호 중에서 민수분야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을 해제하는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하였다."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보다 명백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를 강조하면서 **유엔결의안 2397호 28항**의 제재 해제(강화 또는 수정, 중단, 폐기) 조항 언급

"28. *Affirms* that it shall keep the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is prepared to strengthen, modify, suspend or lift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 (2020.7.4.)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는 **적대시정책철회 명백히** 밝힘
; 일부 제재완화로는 비핵화 진전 불가 주장
"우리의 **비핵화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완화와 바꾸어 먹을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 (2021.3.17.)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 바이든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 것"

○ 요컨대 북한은 바이든 정부에서 핵심요구사항인 대조선적대시정책 전환에 대한 제안 없는 대화 제의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따라서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과 같이 "공은 넘어갔다"는 표현이 성립되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일부)철회할 무엇인가를 북한에 제안해야 될 것

3. UN 결의안 2항의 대북 금지사항에 대한 혼란 가중

○ 모든 유엔결의안 2항에는 북한이 중단해야(shall not conduct) 할 사항 2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즉,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와 핵실험
(2397)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nuclear tests, or any other provocation...."

○ 2019.3 최선희 부상은 15개월간 도발을 중단했다고 주장

-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했지만 트럼프정부는 유엔결의안 위반 아니라고 판단
- 그러나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3.25)에 대해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공식 선언

=> 요컨대: 전자일 경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 가능하나, 후자일 경우 북한의 요구는 성립이 안됨
=> 따라서 결의안을 준수했는지 위반했는지 불명확하며, 북미대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또한 불명확한 상황

4. 한반도 문제의 과제

1) 북미관계에서의 과제

○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만나기 전에 비핵화 약속 있어야” 한다고 언급
블링컨 장관(정상회담 이후 첫 인터뷰) “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관여를 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주장

; 요컨대 대화 전 선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북조선적대시정책 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의 입장과과 대립되는 주장

○ 한미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바탕을 한다는 연속성을 확보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외교적 관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의 제시가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
-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환영한다”는 표현의 모호성을 구체화할 필요

2) 남북관계에서의 과제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관건

- 남북대화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의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즉 <한미워킹그룹>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능을 정상화할지 아니면 기구 폐기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지 논의 필요

○ 기존 남북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화 노력이 필요

-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의 하나인 기존 남북정상합의와 주요 합의 사항 이행이 지체되고 있어, 이행을 위한 제도화 노력 필요하여,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고해야
- 법제처의 판단으로 인해 '4.27판문점 선언'은 (법령21조-'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그러나 우선, 법제처의 판단이 올바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르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또한 과거의 남북합의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까지 모두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보론>. 북한의 당규약 개정에 나타난 중대 변화의 의미 -진희관 -

○ 북한 조선로동당 8차대회의 당규약 개정 내용이 최근 공개되었고 **<서문>의 중대한 문장 내용의 삭제**가 이루어져 매우 중대한 변화로 평가됨

- 당규약 <서문>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를 ".....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 이것은 북한 대남혁명론의 중대한 수정

- 북한 대남혁명론은 1975년 허종호의 이론서[1]를 기반으로 하여 1980년 6차당대회 서문에 명시되었고, 1985년 주체사상총서 5권 '조국통일이론'으로 집대성 된 것.

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총 306쪽).

- 1975년은 군사독재에 대한 반발이었고, 1980년은 신군부와 광주민주화운동(민중학살)에 대한 반발이라 할 수 있음.
- 요컨대 북한 대남혁명론의 요체는 '미제와 군부독재 척결'이 기본 목표이며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혁명' 임.
- 그런데 90년대 이후 군부독재는 사라졌고, 미제의 탄압이라 제시할 근거도 없어서 대남혁명론의 전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당규약에만 남아있었고, 이미 북한의 헌법에서는 1992년에 전국적 범위에서의 남조선혁명론이 삭제됨.

○ 즉, 이미 90년대 초에 수정되었어야 할 당규약이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수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2000년 11월 언론사사장단 방북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당대회를 개최하면 삭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음.
- 다만 36년 만에 2016년 5월 열린 7차 당대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에서 이러한 용어를 수정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 수정되기에 이른 것임.

○ 특히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의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의 내용은 남한 사회와 특히 보수진영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해온 북한의 대남혁명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수정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문장과 낱말의 수정으로 남북관계가 당장 변화하지는 않을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 변화 하나는 역사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

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재 인	**김 정 은**

***참고자료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２０１８년 ６월 １２일 싱가포르에서 첫 력사적인 수뇌회담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이며 심도있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면서 ,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

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 년 4 월 27 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것을 확약하였다.

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다.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회담이 두 나라 사이에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긴장상태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면서 공동성명의 조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리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리행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고위인사사이의 후속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은 새로운 조미관계발전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 안전을 추동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18 년 6 월 12 일

싱가포르 쎈토사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 합 중 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대 통 령
김 정 은	**도날드 제이. 트럼프**

◆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RP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in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up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agre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DONARD J.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IM JONG UN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참고자료3.**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 ·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무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재 인	**김 정 은**

***참고자료4.**

한 · 미 정상 공동성명(2021.5.22.)

◆ 대한민국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한 · 미 정상 공동성명〉 전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

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

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

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MEMO

MEMO

MEMO

【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

한반도 평화, 다시 로그인!

| **발행일** 2021. 6. 15.

| **발행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 **Tel** 02.761.1213 | **Fax** 02.761.6590 | **Homepage** www.kcrc.or.kr

| **디자인 및 인쇄** (주)늘품플러스(070.7090.1177)